

**해양경찰청****보 도 자 료***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목) 즉시	배포 일시	2022. 6. 2.(목)
담당 부서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조윤만 (032-835-2088)
		담당자	계 장 박대웅 (032-835-2189) (010-8702-8562)

해양경찰청,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 면담 및 치안현장 방문 지원

- 해양안보 주권의 평화적 수호와 국제 해양법 역량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일 중회의실에서 주요 국제법 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사무처장(차관급) 일행과 면담하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 등 주요 업무 소개와 더불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양치안 현장 방문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면담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평화적이고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해양안보 주권 수호와 국제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함께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밝혔다.

필립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목표의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 증진과 함께 이를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할을 지속 지지해왔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해양경찰청과 해양치안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범에 입각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의지를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향후에도 해양안보 주권의 수호를 위해 ▲국제해양법 국내·외 전문가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1

필립 고티에 ICJ 사무처장 인적사항

성 명	○ 필립 고티에 (Philippe Gautier)	
생년월일	○ 1960.2.1. (62세)	
출 생 지 및 국 적	○ 부룬디(Burundi)*, / 벨기에 국적 *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으로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및 UN 신탁통치 후 1962년 입헌군주국으로 독립 / 1991년 우리나라와 수교	
직 위	○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Registrar) : 차관급	
학 력	○ 루뱅 가톨릭 대학교 법학석사(1982) ○ 루뱅 가톨릭 대학교 철학석사(1983) ○ 루뱅 가톨릭 대학교 유럽법석사(1985) ○ 루뱅 가톨릭 대학교 법학박사(1992)	
주요 경력	○ 벨기에 외교부 조약국장(1995-1997)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1997-2001)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2001-2019) ○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2019-현재) ※ 2019-26 임기(7년)	
방한 경험	○ 2014.5월 (외교부 2차관 초청) - 당시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 자격으로 방한 - 외교부2차관 예방 및 직원 대상 세미나 - 대법원 행정처장(박병대 대법관) 면담 - 동북아역사재단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및 성균관대 로스쿨 강연	
특기사항	○ 주요 국제재판기구(ITLOS, ICJ) 사무처장 역임 등 핵심 국제법 인사	

1. 설립 배경

-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 설립되었으며, 국가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과 특별 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
 - 설립 이래 현재까지 183건의 사건을 심리(권고적 의견 27건 포함)
- 1945년 ICJ 규정이 유엔 헌장과 함께 채택·발효되었으며, 1947년 영국과 알바니아간 분쟁인 『Corfu Channel 사건』을 첫 재판으로 업무 개시

2. 가입 현황 및 관할권

- 2022.5월 현재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유엔 회원국은 당연 당사국)
- 쟁송사건(contentious cases) : 국가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경우 ICJ가 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 보유
 - 분쟁 당사국간 특정 사안의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compromis*) 체결
 - 분쟁 발생 시 ICJ 회부를 사전에 규정한 양자/다자조약 체결 및 가입
 - ICJ 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에 따라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선언
 - 피소국이(응소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 의사를 표명(소위 '확대관할권')
-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s) : 국제기구 요청 시 법적 구속력 없는 의견 제시

3. 재판부 구성

- 임기 9년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3년마다 정기 선거로 5명씩 교체)
 - 관행상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재판관 1명씩을 배출하며, 기타 10석은 지역별 배분(아프리카 3석, 아시아 2석, 유럽 및 기타 3석, 라틴아메리카 2석)
 - ※ 단, 2017년 선거에서 영국 낙선으로 현재 의석배분은 ▲상임이사국 4석 ▲아프리카 3석, ▲아시아 3석(인도, 레바논, 일본), ▲유럽 및 기타 3석, ▲라틴아메리카 2석

4. 우리나라 관련 사항

- 1991.8.5 유엔헌장 및 ICJ 규정에 대한 수락서 기탁, 1991.9.18 발효
- 우리나라는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바, 제36조 제2항의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재판관할권 부존재
 - 현재 제36조제2항상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총 73개국